

구속력 없는 탄소감축... 벌써 비관론

COP26 공동선언 우려 목소리

WSJ "각국 재량권 너무 많아"

이행 강제 실질적 집행장치 없어

지난 13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결과를 두고 벌써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200여개 참가국이 당초 폐막일을 하루 넘겨며 치열하게 협상한 결과지만, 구속력 없는 점에 있어 여부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합의문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재원을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최소 2배로 늘리며, 내년 말까지 파리협정에 맞게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다시 제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글래스고 협정에 실질적인 집행 메커니즘이 없고 '필요한 대로' 새 계획을 요구할 뿐이며, 각국에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량권을 너무 많이 줬다고 14일 비판했다. 내년 말까지 더 많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약속한다는 조항은 결국 2015년 파리협정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상당히 못 미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내년 11월 이집트에서 열릴 예정이다. 새 NDC를 1년 후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유엔은 현재의 계획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10년에 비해 1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로 제한하려면 45%가 감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계산을 보면 일부 국가는 계획 이행은커녕 다시 판부터 짜야 할 실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규정 변경은 초기 단계의 제안 수준이거나, 자발적인 약속에 의존하고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또 관련 논의가 10개월간 진행됐지만 미 상원은 계획 이행에 필요한 55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았다.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2030년에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시 주석은 목표를 앞당기라는 외부 압박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글래스고 공동선언에서는 탄소 배출량 감축 속도를 높이는 것에 동의는 했지만 상세한 일정을 제시하거나 내년 목표를 업데이트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 1년 후 제시할 계획에서도 주요 목표치를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고 중국 정부 당국자들은 말했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 위한 자금 지원 역시 이행의 발목을 잡을 요인으로 거론된다. 가난한 나라의 대표들은 내년 한 해는 부유한 나라들이 자금 지원 약속을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데 보낼 것이라 말하며 회의를 떠났다. 또 자금 지원 없이는 자신들의 탄소 배출량을 제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환경단체 멸종저항의 '붉은 여단' 활동가들이 13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의 대성당에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실패했다는 의미로 모의 장례식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날 글래스고에서 막을 내린 COP26에서 '글래스고 기후 조약'(Glasgow Climate Pact)이 도출됐지만, 환경단체들은 조약 내용이 기후변화를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에 발목잡힌 바이든... 지지율 41% 최저

중간선거 민주당 41% vs 공화 51%

집권 초 핵심 정책으로 밀어붙인 인프라 예산법안 처리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내년 중간선거 가상대결에서도 공화당이 민주당을 오차 밖에서 앞섰다. 최악으로 치솟고 있는 물가를 비롯해 공급망 사태 등 경제가 발목을 잡았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ABC가 7~10일 미국의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3.5%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41%로 취임 후 가장 낮았다. 부정 평가는 53%에 달했다. 집권 11개월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4월(52%)부터 꾸준히 하락, 데드크로스를 기록한 지난 9월 조사에서 이미 44%로 저점을 찍은 바 있다. 공화당 지지자의 80%가 바이든 대통령을 강하게 부정 평가했고, 무당층에서도 부정 평가 비

율이 45%에 달했다. 민주당 지지자도 등을 돌리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6월 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자의 94%가 바이든 대통령을 긍정 평가한 반면 이번 조사에선 80%만이 그를 지지했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3%에서 16%로 13%포인트 올랐다.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한 실망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0%가 경제 전망에 대해 비관적이라고 답했고, 절반 가까운 응답자는 현재의 심각한 물가상승의 이유를 바이든 대통령 때문이라고 돌렸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9%에 불과, 평균 지지율을 밑돌았다.

당장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 적신호가 들어온 셈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오늘 당장 선거를 실시할 경우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느냐'고 중간선거 가상대결을 벌인 결과, 응답자 중 등록된 유권자의 51%가 공화당이라고 답한 반면 민주당이라는 응답은 41%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태국 '군주제 개혁' 도심 시위

시위대 고무탄에 맞아 부상도

태국에서 군주제 개혁을 촉구하는 도심 시위가 벌어져 시위대 일부가 부상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잠잠해졌다가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군주제 개혁 움직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 및 외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방콕 도심에서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주제 개혁을 촉구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비난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날 시위는 지난 10일 현재가 작던 반정부 인사들의 군주제 개혁 요구는 입헌군주제를 전복시키려는 은밀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관련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한 반발로 나왔다.

시위대는 헌법재판관 9명의 모형을 불태우며 현재를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판결이 태국을 입헌군주제가 아닌 전제군주제로 되돌리려는 것이며, 자신들은 이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시위대는 '전제군주제 반대' '개혁은 폐지가 아니다'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도심 거리를 행진했다. /연합뉴스



백악관 앞 인권 지지 시위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위구르, 티베트, 홍콩, 대만인 등 시위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인권을 지지해줄 것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미중 화상 정상회담 '갈등' 관리에 그칠 듯

양국 기대치 낮추려 '화상회의' 지칭

무역·북한·이란 등 협력안 논의될 듯

미중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상으로 첫 정상회담에 나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톱다운 외교' 한차례로 복잡하게 꼬인 양국의 이해관계를 풀어나가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15일 오후 7시 45분(한국 시간 16일 오전 9시 45분)부터 진행될 이번 회담은 대만 문제와 홍콩 인권 등의 '뜨거운 감자'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양국 간 갈등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실제, 양측은 이번 회담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백악관과 중국 외교부는 '정상회담'이 아닌 '화상 회의'(virtual meeting)란 용어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을 지칭한다. 이는 두 정상에 대한 대

중의 기대치를 낮추려는 미국과 중국 정부의 의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양국 정부는 회담에서 어떤 주제가 논의될 것인지조차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이번 회담에선 대만 안보 문제와 홍콩, 신강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문제 등 '뜨거운 감자'들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미중 정상이 통상 갈등과 북한, 이란 문제 등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사안에서 결과물을 내놓으려 노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실제, BBC는 협상 과정에 밝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사이버안보, 무역, 핵무기 비확산이 협상 의제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미국 국내적으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완화나 수출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 억제와 이란의 핵 합의 복귀 등 지정학적 안보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향을 양국 정상이 표명하는 방식으로 친선의 제스처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두 사안이 진전되는 것은 중국이 동맹해 외교·경제적 레버리지를 행사하는데 달렸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연합뉴스

IBM "양자컴퓨터 새 이정표... 127큐비트 개발"

미국 IT기업 IBM이 기존 컴퓨터로는 할 수 없는 복잡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양자컴퓨팅 프로세서를 개발했다며 '127큐비트' 양자컴퓨터 공개 임박을 시사했다.

아빈드 크리슈나 IBM 최고경영자(CEO)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Axios on HBO)에서 새로 개발한 '이글'(Eagle) 프로세서는 127큐비트(qubit : 양자컴퓨터 연산단위)를 처리할 수 있다며 100큐비트 이상 성능으로 기존 컴퓨터를 능가하는 새 이정표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현재 65큐비트 양자컴퓨터 '허밍버드'를 운용 중인 IBM은 앞서 올해 127큐비트 양자컴퓨터 '이글'을 선보이고, 내년에는 큐비트를 433개로 늘린 '오스프리'를, 2024년에는 1121큐비트 '콘도르'

를 개발을 예고한 바 있다.

기존 컴퓨터 프로세서는 반도체 칩에 집적된 트랜지스터 1개에 0 또는 1정보를 하나씩 저장하지만 양자컴퓨터 프로세서는 0과 1 신호가 섞여 있는 '양자중첩' 상태의 큐비트를 이용한다. 양자컴퓨터 프로세서는 데이터를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막대한 연산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된 것처럼 행동하는 양자얽힘 특성을 이용해 근본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한 통신을 구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양자컴퓨터는 배터리 성능 향상이나 이산화탄소 배출 축소 기술 등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로도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컴퓨터·통신 보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중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에코EV102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나이스1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 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